

“年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산안법 개정안 7건 우선처리
안전의식 확산·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테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 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6·3 지선공천에 ‘PT 평가’ 도입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성과 평가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테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 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권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전섭 특검, ‘관봉권·쿠팡 의혹’ 파헤친다

李 대통령, 임명안 재가
안 특검 “막중한 책임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전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전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전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피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피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폴필먼트서비

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전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과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중동서 ‘평화·번영·문화’ 협력증진

G20 정상회의 위해 7박10일 순방
UAE 아부다비 도착… 국민일정 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민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난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민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엔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민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 기자